

남북정상회담과 사회문화교류

이 우 영*

- I. 문제제기
- II. 사회문화교류와 남북관계
- III. 기존 사회문화교류의 성찰
- IV.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문화교류의 방향
- V. 정상회담 이후 사회문화교류

국문요약

평창 올림픽 이후 개최된 남북 공연 예술단 방문은 10여 년 만에 이루어진 대규모 사회문화교류 사업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화교류가 주요 과제로 다루어졌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판문점 선언이 합의되면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및 문화 교류를 통해 남북 정상 회담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과거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문제는 반복 될 것이며 사회문화적 교류의 의미는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사회문화교류의 사례에 대한 성찰과 앞으로의 교류의 구체적인 분석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문화 발전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방향이 정립하여야 한다. 첫째, 사

회문화교류를 통해 남북한의 차이를 인식하여 공통의 요소를 확보하여 국가 차원의 공동체를 구축해야한다. 둘째, 이해와 신뢰 형성 과정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이 촉진되어야한다. 셋째, 남북 관계 발전과 사회문화교류가 제도화되어야한다. 넷째, 남한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끌면서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평화 문화를 수립하는 과정으로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민간과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점진적인 방향으로 협력해야 한다.

주제어: 평창 올림픽, 남북 정상 회담, 판문점 선언, 남북 사회문화교류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I. 문제제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2018년 4월 27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전환을 기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 동안 남한의 보수정권 집권과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는 경색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또 전쟁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였다는 점에서 최근 상황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따지고 보면, 분단과 함께 두 나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적대적 갈등관계를 유지했지만, 1972년 7·4 공동선언을 보듯 관계개선 노력도 병행해왔다. 이후 관계가 악화되기도 했지만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10·4 공동선언이 발표되기도 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전쟁 이후 남북관계는 짙은 굴곡이 있으면서도 평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나라의 관계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시급한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분단 이후 70여 년 동안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분단으로 파생된 문제는 이념투쟁이나 군사적 대치 뿐 아니라 문화적 이질화, 일상의 차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까닭에 비핵화와 같은 우선적 과제가 극복하더라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예상되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가령, 남북한 당국의 대북·대남정책이나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지향하는 사회내부의 동력들도 점검해야 한다. 북한 지도부의 의지와 내부 사회경제적 현실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이다.¹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10여 년 만에 성사된 남북한 간 공연예술단의 교환 방문은 대규모 사회문화교류사업으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뒤이어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문화교류가 주요 의제로 언급된 까닭에 앞으로 교류협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²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단절된

¹ 사회문화교류는 협의의 차원에서는 남북한 간 학술, 문화예술, 종교, 체육, 언론출판 분야의 교류이고 광의에서 본다면 대북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인적 교류도 포함된다. 심영희, “남북 사회문화교류: 대북포용정책의 의의와 전망,” 『사회과학논총』, 제20권 (2001), pp. 143~144. 이 글에서는 넓은 의미의 사회문화교류를 다루고자 한다. 남북 협력 사업은 경제 분야에서 남북이 이익을 추구하고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교류사업과 차이가 있다.

지난 몇 년을 생각하면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관심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대만큼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2000년대 활발하게 추진된 사회문화교류들이 두 나라의 관계 발전이나 상호 증진에 기여한 바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기존 사회문화교류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따져보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사회문화교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떤 요소들을 검토해야 할 지 논의했다.

II. 사회문화교류와 남북관계

현재 남한의 공식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제시했고,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마련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통일, 단계적·점진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화해·협력 단계, ② 남북연합 단계, ③ 통일국가 완성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³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된 후 20여 년이 지났고 그 동안 정권이 수차례 바뀌었지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폐기된 적은 없으며, 근본 철학이나 원칙이 바뀔 가능성도 높지 않다.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르면, 남북관계가 단계적으로 진전하는 경우 한반도의 냉전구조도 해체되면서 평화체제가 구축된다.⁵ 민족공동

² 판문점 선언에서 사회문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1-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³ 김상범·김중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 발전 방안 연구, 『북한학연구』, 제12권 1호 (2016), p. 153.

⁴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극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방안은 지속되어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것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졌으며 무엇보다도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 대다수의 국민들이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김상범·김중수 위의 글, p. 156; 이창현,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특징과 평가,” 『統一問題研究』, Vol. 9 (1991), pp. 78~81; 고유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행과정과 추진전략 재검토,” 『통일인문학』, 제60집 (2014).

⁵ 이우영·손기용·임순희,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6.

체통일방안에서 사회문화교류가 제기된 것은 화해협력단계에서 남북한이 적대와 대립을 화해와 협력관계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즉, 남북은 상호 두 체제를 인정·존중하는 가운데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가 필요하게 된다.⁶

사회문화교류는 화해협력단계를 넘어 남북연합과 통일국가 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해협력단계에서 사회문화교류를 통해 사회문화공동체가 형성되면 경제협력을 통해 이룩된 경제공동체와 연합단계의 토대가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공동체가 형성되면 통일국가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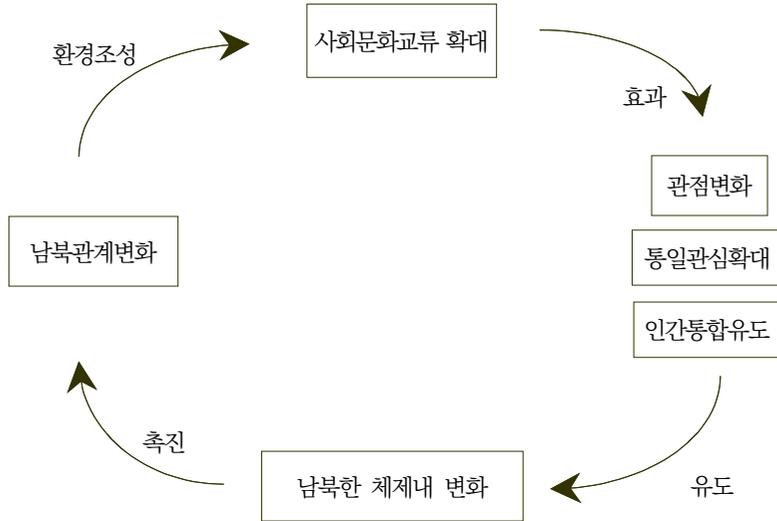
사회문화교류와 남북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다음의 <그림 1>이다. 순환구조의 처음은 아래 부분의 남북한체제 내 변화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하여 1987년 체제를 성립한 남한이 이를 토대로 민족공동체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하였다. 이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사회문화교류가 확대되기 위한 조건이 형성됐다. 교류확대를 통해 접촉면이 넓어지면 상대방에 대한 기존 관점이 변화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또 남북 사회문화교류에 참가하는 주민들은 ‘인간통합’을 경험하게 된다.⁷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북한은 교류확대를 위한 세부 제도를 마련하는 등 체제내부 변화를 겪으면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선순환구조를 반복하게 된다.⁸

⁶ 이기동, “통일환경의 변화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국동북아논총』, 제71권 (2014), p. 194.

⁷ 사회문화교류과정에서 남북한 사람들을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인간적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우영,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마음의 통합,” 『현대북한연구』, Vol. 17, No. 2 (2014) 참조.

⁸ 2000년대 사회문화교류가 확대되면서 남한에서는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등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북한은 교류 초기에 남북한 사람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점차 접촉면의 제한이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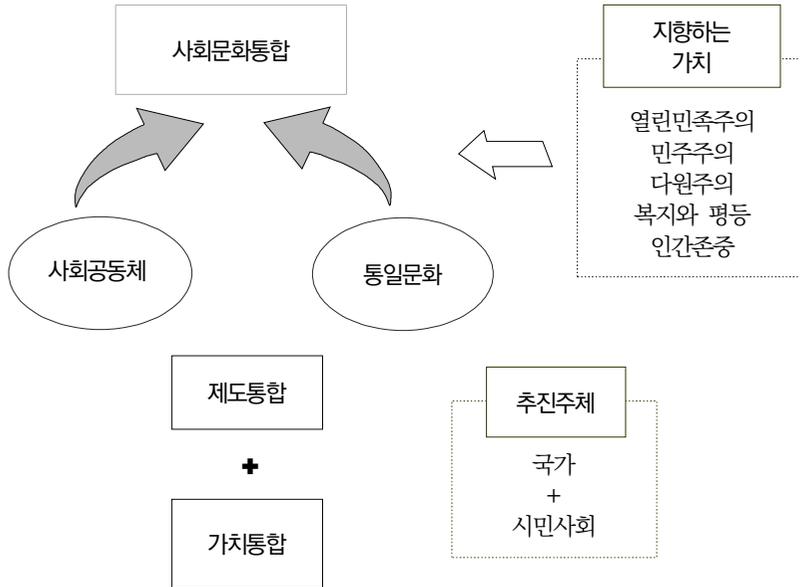
〈그림 1〉 사회문화교류와 남북관계



사회문화교류는 남북관계 진전과정뿐 아니라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통일은 단순히 단일한 국가체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는 남북한 주민 간의 사회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고, 문화적 차원에서는 통일문화를 형성하여야 비로소 완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문화교류는 통일국가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사회문화 통합과정이 된다. 사회문화교류(통일이전)와 사회문화통합과정(통일 이후)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면 독일 등 분단국가의 통일과정에서 보듯 사회문화적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⁹

⁹ 심영희, “남북 사회문화교류: 대북포용정책의 의의와 전망,” p. 141.

〈그림 2〉 통일 이후 사회문화통합과정



사회문화교류가 통일과정이나 통일이후에도 필요하지만 모든 사회문화교류가 〈그림 1〉처럼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합과정에 순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남북한과 같이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체제 뿐 아니라 주민들과 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유지해온 경우, 교류과정의 접촉이 상호이해가 아니라 거리감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흔히 사회문화교류 확대가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평화공존과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순진한 사고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독자적으로 구조화된 문화들이 만나서 공존하는 사례보다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과적으로 사회갈등으로 비화된 일이 많았다.¹¹ 이러한 맥락에서 단순히 사회문화교류 확대를 강조하기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동반하는 사회문화교류를 지향하는 일이 필요하다.

¹⁰ 반공교육과 반자본주의교육에 받아들인 남북한 주민들은 냉전문화에 길들여져 있고, 서로 다른 문화를 형성해온 까닭에 사회문화교류과정이 이질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¹¹ Samuel Phillips Huntington, 이희재 옮김,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2016) 참조.

Ⅲ. 기존 사회문화교류의 성찰

분단 후 30여 년 동안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한반도 내 냉전 기류 속에서 진전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1950~60년대에 걸쳐 북한이 남북 언론인 교류(1957), 제17차 올림픽대회 단일팀 구성(1958), 남북 공동 영화제작 및 연극공연대회(1965), 남북 기자 및 과학자 교류(1966) 등 수 차례 제의를 한 바 있으나, 통일전선전략차원의 '선전성 제안'에 불과할 뿐 실천할 의지가 부족했다. 1980대 들어 남북교류는 체육회담, 적십자회담 등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상호교환(1985)이 교류의 첫 성과로 기록됐다. 그러나 1988년 남한 정부의 '7·7 특별선언'으로 인해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¹²

'7·7 선언'으로 남북 교류의 적극화 의지가 대내외적으로 표명된 이래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시행(1989),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발족(1989),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제정(1990), '남북문화교류의 5대원칙'¹³ 발표(1990),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채택·발효(1992),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199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98) 등 일련의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평화·화해·협력' 실현과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대북포용정책 추진을 천명했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이뤄진 사회문화교류 역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1985년 처음 열린 이산가족상봉이 15년 만에 재개됐고, 정상회담 직전 북한 소년예술단과 평양 교예단이 서울을 방문해 공연을 펼쳤다.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음악회에서는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단독공연, KBS교향악단과 합동공연이 선보였다. 남한의 언론사 사장단은 북한을 방문해 적대적 언론보도를 지양한다는 약속을 했고, KBS가 추석을 맞아 백두산 현지에 생방송을 가지기도 했다. 삼성 탁구단은 평양에서 시합을 벌였고, 그 장면은 생방송으로 전파를 탔다. 이 외에도 대중가수들의 평양공연과 TV프로그램 합작 등 대중문화교류, 북한 미술품의 남한전시 같은

¹² 7·7 선언은 남북교류의 적극추진, 남북한 간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통한 관계개선과 평화정착을 목표로 하였다.

¹³ 문화교류과정에서 분단이전의 민족전통문화를 우선적으로 교류, 승부 및 경쟁적 분야의 배제, 전통문화의 원형을 변형, 또는 훼손하는 표현방식의 지양, 쉽고 작은 일부터 시작, 공동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경주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순수예술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됐다. 문화재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학술 교류, 일반인에서 국가대표에 이르는 체육교류 등 사회문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분야에서 교류도 이루어졌다.¹⁴

과거와 비교해 2000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진 사회문화교류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제3국이 아닌 남북한 현지에서 사회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과거 사회문화교류 중심은 남북한보다 일본이나 중국 등 제3국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사회문화교류는 남한(소년예술단·평양교예단·평양교향악단)과 북한(탁구시합·백두산 현지방송)에서 진행됐다. 단순히 장소 문제만은 아니다. 제3국의 사회문화교류는 참여자에 국한된 교류이지만, 현지에서의 사회문화교류는 비록 인원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남북의 문화를 상대편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의 교류로 볼 수 있다.

둘째, 교류장소를 비교할 때 남한에서 추진된 사회문화교류가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 비교적 남북교류가 활발했던 1990년대 초 총리급회담과 기본합의서 체결을 전후한 사회문화교류 장소는 제3국이나 북한이 많았다. 북쪽 사람들이 남한을 방문해 공연을 펼친 것은 1985년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할 당시 동반한 예술단 공연 이후 전무했지만 2000년대 초 소년예술단과 교예단, 북한의 예술작품 및 문화재 교류는 남한에서 이루어졌다. 6·15와 8·15 행사 역시 남북을 오가며 개최됨으로써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사람도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국가가 사회문화교류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제1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진 문화교류는 외면적으로는 민간의 주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 직전에 있었던 소년예술단과 교예단 방한은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했고, 평양교향악단 공연 역시 남한 정부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이후 통일부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는 사회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직접 지휘하지 않았다고 해도 통일부의 협력기금 등을 통해 사회문화교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넷째, 자본의 결정력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평양교예단이나 평양교향악

¹⁴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남북 사회문화교류 중장기 로드맵 설정 및 추진 전략 연구』(서울: 통일부 용역보고서, 2007), 3장 참고.

¹⁵ 교향악단의 경우 KBS가 초청대상자였으나, 이미 한 민간단체가 4월에 북측과 방문공연에 계약한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분쟁도 야기되었다.

단의 공연 등 북한 예술단 초청뿐 아니라 북한을 방문하는 공연 등에도 필요한 경비 외에 북한은 별도 대가를 요구하면서 자본의 영향력이 높아졌다. 경비 문제는 남한에서 소위 ‘퍼주기’라는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¹⁶

다섯째, 언론이 결합되는 등 사회문화교류가 복합적인 성격을 띠었다. 시민들이 공연이나 행사를 직접 참여하지 못해도 신문과 방송을 통해 사회문화교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문화교류의 경험을 확산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 물론 언론 교류 자체도 의미 있는 성과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회문화교류의 성과를 확대시켰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여섯째, 사회문화교류의 다양성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소년예술단, 교예단, 교향악단, 방송, 체육 등 정상회담 전후 각종 사회문화교류의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남한이 교류의 중심지가 됨으로써 과거에 접하지 못하였던 북한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정상회담을 통해 2000년대 사회문화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성격변화에 기인한다. 즉,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되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양적으로 확대된 사회문화교류는 다음 몇 가지 문제도 갖고 있었다.

첫째,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됐다고 하지만 반대로 정치의 예측성은 더욱 높아졌다. 2000년대 사회문화교류는 정상회담 개최와 합의문 도출 등 남북관계 개선에서 힘입은 바 크다. 즉, 과거에는 정부가 민간의 사회문화교류를 막아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에는 정부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회문화교류를 독려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정부의 정치적 입장에서 따라 사회문화교류가 좌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둘째, 남북관계 발전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서부터 비롯된 만큼 사회문화교류에서도 정부의 몫이 확대돼 민간부문이 위축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남북관계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사회문화교류에 적극 개입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문화의 자발성을 강조한다면 남북 사회문화교류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국가가 개입하는 교류는 정치적 홍보로 전락해 사회통합이라는 본질적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셋째,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사회문화교류에

¹⁶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편), 『남북 관계사: 갈등 과 화해의 60년』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2009), p. 507.

서 상품성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는 점이다. 출연료나 공연료 등의 사례는 어느 공연에나 필요한 지출이지만 적절한 가격과 동떨어져 과도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사회문화교류마저 대 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 향후 사회문화교류도 시장원리가 적용돼 상품성이 높은 문화만이 교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넷째, 반세기 동안의 적대적 분단 상황으로 인해 상대 문화를 수용할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못했다는 점이다. 남북이 경험한 분단 상황은 단순히 둘로 나뉘어 있는 것을 넘어 정치·군사적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것이었다.

남북한 주민 간 만남은 곧 위법이었고, 상대 문화는 당연히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가 형성됐다. 특히 남한에서는 북한 문화에 접촉하는 자체가 보안법 위반 사항이었고, 이는 반 국가사범인 것을 의미했다.¹⁷ 이처럼 상대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커녕 아무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적 적개심을 유지한 채 갑자기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은 일시적 호기심 충족 수준에 그치거나, 과거의 문화적 편견을 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평양교예단의 공연을 보면서 북한 독재체제의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¹⁸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문화교류를 통해 ‘문화적 거리감 → 인간적 거리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IV.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문화교류의 방향

분단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사회문화교류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화해 분위기가 고양되면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되고 반대로 경색되면 사회문화교류도 위축됐다는 사실이다. 사회문화교류가 전 방위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선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정착돼야 한다. 평창올림픽과 4·27 판문점 정상회담은 교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물론 사회문화교류가 남북한 상호이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해도 그 자체가 충분조건은 아니다. 통일 과정에서 사회문화교류는 역기능을 수행

¹⁷ 북한의 경우는 다소 다르다. 남북한문화의 본질적인 차이 즉 남한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다양하였기 때문에 남한 문화 가운데 일부는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소개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황석영의 작품이 대표적이며, 이 밖에도 주로 민중문학 계열의 작품들은 북한 주민들이 접할 수 있었다.

¹⁸ ‘교예단원이 실수하면 탄광에 끌려가지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다’거나 소년예술단의 공연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가혹하게 훈련시킨 결과’라고 생각하는 식이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사회문화교류의 바람직한 요소를 확대하면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일이다.¹⁹ 이러한 맥락에서 발전적인 사회문화교류를 위해 다음 몇 가지 기본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문화교류를 통해 남북 간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공동의 요소들을 확보해 민족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지난 70년은 체제 간 차이로 인하여 문화와 생활방식 전반에서 이질화가 심화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말을 쓰면서도 용례가 다르고, 정치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 차이는 갈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북한을 다녀 온 사람들이 많이 느끼듯 그 사회를 지탱하는 김일성, 김정일 두 지도자의 초상화와 동상, 구호 등이 북한에 대한 생경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기제들이다. 이러한 문화차이는 곧바로 남한 사회의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사회문화교류는 이러한 상호 이질성에 대한 확인 과정이 아니라, 우리 문화가 단일민족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 내부에 다양한 문화형식이 축적되어 왔음을 이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둘째, 상호 이해와 신뢰 형성 과정의 축적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문화교류 및 협력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사회문화교류를 둘러싼 남북 간 관점 차이는 시대별로 변화해왔다. 북한이 체제경쟁에서 우위에 있었던 1950년대에는 사회문화교류에 적극적이었다.²⁰ 그러나 체제 경쟁에서 남한이 우위를 점하게 된 1990년대에는 남한이 사회문화교류에 공세적이었다.²¹ 이러한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남북 사회문화교류가 자칫 각자의 체제 우월성의 선전 공간으로 자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사회문화교류는 체제경쟁에서 벗어나 그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관계 발전과 사회문화교류도 제도화 단계로 가야 한다. 사회문화교류

¹⁹ 백영철 외, 『21세기 남북관계론』 (서울: 법문사, 2000), p. 371.

²⁰ 1954년 4월 27일 제네바 회담에 나온 북한 대표 남일은 “조선의 민족통일을 실천하기 위해 경제 및 문화교류, 즉 통상, 재정회계, 운수, 경계선 관계, 주민의 통행 및 서신의 자유, 문화 및 과학교류 및 기타를 설정, 발전시킬 대책들을 즉시 취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수석, “북한의 대남 사회문화교류정책에 관한 연구,” 『KOREASCOPE 연구논문자료』, 제5권 (2000), <www.koreascope.org/gnuboard> (검색일: 2007.11.25.).

²¹ 당시 남한은 “남과 북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상호개방을 통해 민족구성원들이 서로 상대방의 실상을 알 수 있도록 한다”라거나 “남과 북은 민족전체의 복지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체신, 학술·교육, 언론·출판, 종교, 보건, 환경, 체육,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는 매우 강한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은 남한이 제기한 안에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빼는 안을 제기하면서 “악취를 풍기는 썩은 문화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최대석, “남북한 사회문화교류협력 추진방향,” 『통일연구논총』, 제4권 2호 (1995), p. 80.

제도화란 공동기구 구성을 비롯해 공동의 준거틀을 만들어 법제화함으로써 제반 교류가 일시적 혹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단절과 재개가 반복되면서 사회문화교류도 불안정했던 제도화 부족의 탓이 크다. 그런 점에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제도화 단계로 진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남한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평화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남북 사회문화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사회문화교류가 사회통합 또는 더 나아가 사회문화적 공동체 구성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했을 때, 현 단계의 사회문화교류가 남과 북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만의 교류가 되는 것으로 부족하다. 남북 내 사회현상, 문화현상에서 여전히 분단의 잔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유격대국가’ 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전쟁 지향적이고 권위주의체제라고 해서 남한의 입장에서 사회문화교류를 ‘북한 변화 유도’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남한이 민주화를 이뤘다고 하나 여전히 분단문제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²²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문화는 새롭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그 바탕은 민주주의의 확산과 평화문화의 정착이라 할 수 있다. ‘접근을 통한 변화’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이와 반대로 남북한이 모두 ‘변화를 통한 접근’을 지향해야 한다. 사회문화교류를 통해 남북은 더 가까워 질 것이고, 북한의 변화는 스스로 하는 것인 만큼 남한도 남북통합의 미래 구상 위에서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²³

다섯째, 점진적, 단계적 방향 하에 민·관이 협력해 모든 영역에서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사회문화교류가 사회통합이라는 큰 틀 속에 있음은 물론, 단계적이면서도 점진적인 통일 과정과도 부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남북 사회문화교류 협력단체 간의 조정, 협력기구를 시급히 형성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사회문화교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남북한관계의 진전과 부합해야 한다. 적대적 상황인지 혹은 화해협력 상황

²² 조한혜정 외, 『탈분단 시대를 열며: 남과 북, 문화공존을 위한 모색』 (서울: 도서출판 삼인, 2000).

²³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가 있다.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받는 이 법의 문제점을 과감히 고치는 것이다. 통일교육에 대해 평화문화를 확산시키는 교육으로 변화시키는 일도 있다.

인지, 평화정착 단계인지에 따라 사회문화교류의 주안점과 구성은 각기 다를 수 있다. 또 남북관계 진전은 남북당국 간 회담을 포함해 제도화를 동반한다는 점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²⁴ 기본합의서 채택 후 사회문화 관련 부속합의서가 체결된 것처럼, 향후 남북관계 개선이 진전되면 문화협정 체결도 가능할 것이며,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기본 틀은 협정 내용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둘째, 남북한 체제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시장화가 진전됐고, 이 과정에서 '한류'를 포함한 외부문화의 유입도 가속화됐다.²⁵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모란봉악단'이 상징하듯 문화정책의 변화도 적지 않다.²⁶ 남한은 범지구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문화적 다양성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젊은 세대의 민족 및 통일의지는 약화되고 있다.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교류 사업은 추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회문화교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관계나 남한 내부 상황뿐 아니라, 교류를 추진하는 주체나 교류 상대인 북한의 역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했지만 북한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졌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다르지 않다. 남한에서 이산가족은 월남자를 생각하는 경향이 크지만, 역설적으로 북한에서는 '체제 배신자'에 속한다. 인도적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밖에도 남북한이 교류 아이টে를 실질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 대상이다.²⁷

넷째, 사회문화교류의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문화교류를 일반적으로 인적 교류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그 성격은 매우 복합적이고 인적 접촉이 없이도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남한 사회에서 북한 소설을 출판하거나, 남한 TV에서 북한 영화를 방영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문화교류가 될 수 있다. 인터넷을 포함한 뉴미디어(New Media)를 통한 교류도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교류는 북한의 내부 사정과 관계없이 추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²⁴ 판문점 선언의 개성 공동 사무소의 설치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²⁵ 박영정, "북한에 부는 '한류 열풍'의 진단과 전망," *JPI Research Series*, Vol. 2011, No. 12 (2011).

²⁶ 강동완,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하다』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4), 1부 1장.

²⁷ 예를 들어 한때 윤이상 음악제를 남북이 개최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 당시는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음악제가 성사되지 못하였지만, 당시 남한의 어떤 오케스트라도 윤이상의 주요 작품을 연주할 수 있는 편성을 갖고 있지 못하여 기술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다섯째, 사회문화교류 발전을 위한 남한체제 내부의 정비부터 서두를 필요가 있다.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사회문화교류와 관련 있는 정부 부처 간 업무분장이 시급하고, 지방정부를 포함한 사회문화교류 관련 정부·민간·기업의 협력 체제를 다져야 한다. 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의식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보안법과 저작권법 등 사회문화교류를 저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장비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필요하다면 가칭 ‘사회문화교류 진흥원’ 같은 법적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V. 정상회담 이후 사회문화교류

그동안 정치 환경이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사회문화교류의 가능성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현재 문재인 정부는 화해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한다고 밝혔고, 시민의 자율성이나 중요성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문화교류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정치적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연락사무소가 운영되면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한 제도화수준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또 경제협력 사업과 달리 대북제재와도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는 분야가 사회문화교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교류 확대에 부정적인 요인들도 있다는 점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문화교류를 추동할 수 있는 남한 사회 내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 사회문화교류는 남한이 주도해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 적대적인 보수 정권이 10년 가까이 유지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악화돼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²⁸ 2000년대 10여 년 동안 이루어진 사회문화교류 사업에서 얻은 교훈 가운데 하나는 남북 사회문화교류가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시장을 기초로 한 남한사회에서 사회문화교류사업을 민간부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창올림픽과 더불어 예술단 교환 방문이 관심을 끌었던 것은 지난

²⁸ 남한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과 더불어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실험 반복으로 반공(反共)을 넘어서서 혐북(嫌北)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강호제, “혐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통일뉴스』, 2017년 4월 10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376>> (검색일: 2018.04.29.).

10여 년 동안 남북한 간 교류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둘째,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할 시민사회의 환경이 열악한 현실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문화교류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사회문화교류에 적극적이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장기간 걸친 교류단절로 관련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고, 실무자로 교류의 경험을 쌓았던 인적자원들의 손실도 적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도 부족하고 물적 토대도 약화된 시민사회가 정상회담 이후 사회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담당하지 못하면 2000년대 초반과 같이 정부 주도의 사회문화교류가 중심을 잃을 수 있다. 국가나 공공부분의 적극적인 사회문화교류가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적 이해에 좌우되거나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셋째, 2000년대와 최근의 북한의 모습은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적인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과거 사회문화교류에 북한을 유인했던 경제적 동기가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과거 사회문화교류에서 대북지원 사업이 역할이 적지 않았는데,²⁹ 현재 북한은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전반과 같이 긴급구호가 절실하지 않다.³⁰ 과거 대중문화공연을 비롯한 문화교류에도 북한이 비용을 받았지만, 경제난이 해소된 오늘날에도 과거와 같은 입장을 지속할지 의문이다. 체제경쟁에서 열세에 있는 북한이 접촉이 동반되는 사회문화교류에 소극적인 현실에서 북한을 유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의 효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길로 들어서고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듯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 되면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은 사회문화교류부터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난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성찰이 없이 진행된다면 문제점은 반복될 것이고, 사회문화교류의 의미도 퇴색될 수 있다. 과거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발전적인 교류방안을 모색하는 로드맵을 구축하면서 교류를 시행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통일 개념에 대한 근본적 고민도 사회문화교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통일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²⁹ 『대북지원 20년 백서』(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2015) 참조.

³⁰ 최근 대북지원단체들은 개발지원으로의 성격전환을 논의하고 있으나, 당장 추진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김석진, “개발협력 국제규범과 북한적용 문제”; 정구연, “시민사회의 대북개발협력 가이드라인 및 협력 방향.” 『대북개발협력의 경험과 새로운 패러다임』(조록우산어린이재단·통일연구원과 대북개발협력 학술회의, 2018.04.20.).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단의 의미가 하나였던 체제가 둘로 나누어진 것이
 라 여긴다면 원상회복은 당연히 하나로 되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
 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체 체제
 라는 관점에서 보면 통일을 커다란 개념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사회 각 부문이나
 하위체제에서도 통일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 체제에서는 통합이 적절한
 개념이 될 수 있지만 문화 수준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흔히 '통일문화'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문화적 통일, 문화적 통합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제국
 주의 문화론에서나 지향하는 일이다. 문화는 통합도 아니면 통일도 아니며 공존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통일은 제도적 통일, 사회적 통합,
 문화적 공존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토대가 돼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제출: 5월 4일 ■ 심사: 5월 16일 ■ 채택: 6월 7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동완. 『모란봉악단, 김정운을 말하다』.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4.
 백영철 외. 『21세기 남북관계론』. 서울: 법문사, 2000.
 이우영·손기웅·임순희.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1.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편). 『남북 관계사: 갈등 과 화해의 60년』.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2009.
 조한혜정 외. 『탈분단 시대를 열며: 남과 북, 문화공존을 위한 모색』. 서울: 도서출판 삼인,
 2000.
 Huntington, Samuel Phillips. 이희재 옮김.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2016.

2. 논문

- 고유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행과정과 추진전략 재검토.” 『통일인문학』. 제60집,
 2014.
 김상범·김종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안 연구.” 『북한학연구』. 제12권 1호,
 2016.
 박영정. “북한에 부는 ‘한류 열풍’의 진단과 전망.” *JPI Research Series*. Vol. 2011, No.

12. 2011.
- 심영희. “남북 사회문화교류: 대북포용정책의 의의와 전망.” 『사회과학논총』. 제20권, 2001.
- 이기동. “통일환경의 변화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국동북아논총』. 제71권 0호, 2014.
- 이수석. “북한의 대남사회문화교류정책에 관한 연구.” 『KOREASCOPE 연구논문자료』. 제5권, 2000.
- 이우영.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마음의 통합.” 『현대북한연구』. Vol. 17, No. 2. 2014.
- 이창헌.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특징과 평가.” 『統一問題 研究』. Vol. 9. 1991.
- 최대석. “남북한 사회문화교류협력 추진방향.” 『통일연구논총』. 제4권 2호, 1995.

3. 기타자료

- 김석진. “개발협력 국제규범과 북한적용 문제.” 『대북개발협력의 경험과 새로운 패러다임』. (초록우산어린이재단·통일연구원과 대북개발협력 학술회의, 2018.04.20.).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북지원 20년 백서』. 2015.
-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남북 사회문화교류 중장기 로드맵 설정 및 추진 전략 연구』. (서울: 통일부 용역보고서, 2007).
- 정구연. “시민사회의 대북개발협력 가이드라인 및 협력 방향.” 『대북개발협력의 경험과 새로운 패러다임』. (초록우산어린이재단·통일연구원과 대북개발협력 학술회의, 2018.04.20.).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Socio-cultural Exchange

Woo Young Lee

The exchange of visits by the performing arts groups between the two Koreas, which took place in 10 years after the PyeongChang Olympics, attracted a great deal of attention as a large-scale socio-cultural exchange project. In the inter-Korean summit, the various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including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are mentioned as the main agenda. A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settled and the Panmunjom Declaration is agree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inter-Korean summit will be activated from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with relatively little political burden. However, if there is no reflection on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in the past, the problems will be repeated and the meaning of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can be discarded. More than ever, it is more necessary to establish a road map for concrete analysis of past cases and developmental exchanges. In this context, several basic directions are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socio - cultural exchange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nation-wide community by securing common elements on the basis of recognizing the difference between North and South through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Second,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should be promoted in terms of accumulation of understanding and trust formation process. Thir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exchange of socio-cultural culture should be institutionalized. Fourth, it should be a process of expanding democracy and establishing a peace culture in the South Korean society while leading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inter-Korean society culture. Fifth, the public and the government should cooperate under the gradual and gradual direction to realize integration in all areas.

Key Words: PyeongChang Olympics, The Inter-Korean Summit, Panmunjom Declaration, Inter-Korean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